

## 새로운 북한경제 연구 모색

조봉현 |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 chobh21@korea.com

한반도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이다. 경제문제 중심으로 남북이 신뢰를 갖고 협력하며 상생 발전해 나가는 것은 이념과 체제를 떠나 가장 접근하기 용이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이후 경제 변화를 꾀하고 있다. 2012년 6·28방침과 2014년 5·30조치로 시장경제 및 자율경영체제 요소를 도입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개발구를 추진하고 있다. 7차 당대회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년)도 제시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그동안 압축성장을 통해 짧은 기간에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이젠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도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등 그동안 대기업의 주력 산업이 중국의 추격과 경쟁력 저하로 더 이상 한국경제를 이끌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한국경제는 지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찾아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물론 북한의 변화가 전제돼야 하지만, 북한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다. 시장경제 논리가 적용되고 원칙이 있는 상생의 남북 경제협력 추진과 남·북·중, 남·북·러 등 다자간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통일경제의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북한경제 연구도 이러한 상황 변화와 미래 대비 차원에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북한경제 연구는 크게 이론적 연구와, 정책적 연구, 경영 측면에서의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어떤 연구이든 현실을 파악하는 연구가 기본이 된다. 북한의 경우에는 경제통계가 없고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북한경제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는 연구이다. 물론 북한경제를 전망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북한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분야일 것이다. 그리고 정부나

기업 등 경제 주체에서 필요한 대응연구도 있어야 한다. 북한경제의 상황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강화돼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북한경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가치가 높지 않을까 한다. 먼저, 거시적인 측면에서 꾸준히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연구이다.

첫째, 북한경제 통계를 생산하는 연구이다. 경제학의 기초가 되는 것은 통계 데이터이다. 데이터 없이 현황을 분석하기는 어렵고 신뢰성도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북한 통계 데이터를 연구하여 축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통계를 생산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북한이 부분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나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 등에서 언급되는 숫자를 DB화하고 이를 축적해 나가면 북한경제에 대한 통계를 일부라도 생산할 수 있다. 이것이 쌓이면 요즘 화두가 되는 빅데이터가 가능하다. 북한 통계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 연구를 하루 빨리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북한의 전력사정, 기업 가동률, 생산능력 등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으면 하나의 산업경제통계를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경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구이다. 쉽지는 않다. 북한의 자료를 입수하거나 방북해서 실상을 조사, 파악해야 하는데 그 또한 어렵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입수되는 정보를 모두 동원해서라도 북한경제의 실상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최근 북한경제의 성장을 두고 논란이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북한경제가 최소한 3% 정도 성장하고 있다고 본다. 방북한 사람들도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 평가를 하는 측면에서는 북한경제가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북한경제 추정에서도 북한경제가 4년 연속 플러스 성장하다 2015년에는 마이너스로 다시 전락한 것으로 발표했다. 북한경제의 실상 파악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통일 대비 경제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통일은 우리 사회 경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통일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통일경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미래 대비 연구가 필요하다. 갑작스럽게 통일이 되면 일정 기간 남북 지역의 경제를 분리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통합해서 운영할 것인지 등은 매우 중요하다. 농업, 화폐통합, 금융, 노동, 주택, 국토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해 놓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현실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북한경제 연구활동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첫째, 남북 및 다자간 경제협력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경제협력이 모두 중단됐다. 하지만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경제협력을 재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개성공단 재개의 경우 대북제재 국면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무조건 재개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또 재개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 진전을 이루기도 어렵다. 개성공단을 재개하더라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이전보다 보다 더 발전적 형태로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북한의 장마당 등 시장경제 연구가 활발해야 한다. 북한에서의 시장경제는 북한경제의 구조 변화를 초래하고 주민들의 의식 변화 등 과거에 없던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장마당 숫자도 중요하지만, 장마당에서의 거래 행태, 가격 동향, 유통망, 주민의식 변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

셋째, 북한경제개발구에 대한 연구이다. 김정은 정권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경제개발구이다. 경제개발구가 제대로 계획되어 이행되고 있는지, 제약 조건은 무엇이고, 성공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연구이다. 향후 남북 경제협력 재개 시 북한경제개발구를 활용하여 제2 개성공단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넷째, 북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북한경제가 제대로 성장하여 통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산업이 발전하고 많은 기업들이 탄생해야 한다. 현재 북한의 산업 수준과 한국과의 격차, 산업협력, 기업 구조조정 등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대북제재의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북한이 4~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대북제재가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는지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있어야 한다. 대북제재의 한계와 보완책을 계속 연구하여 대북제재로 하여금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이 갈수록 북한경제 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는 연구 차원을 넘어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절실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국책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북한경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통일경제 시대를 대비해 나가야 한다. 물론 북한경제 연구의 중복성은 가능한 줄여야 한다. 연구기관들이 모여 북한경제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 공유와 연구 협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하다.